



주간통일정세 2010-33(2010.08.09~08.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3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노동당, 조국통일 해야 강성대국 가능(8/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노동당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조국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요지의 지시문을 지난달 말 전체 당 간부와 당원에게 시달
 - 방송은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해 북한이 처한 대내외 정세와 대책을 다룬 노동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이 지난달 말께 각 도당을 거쳐 전국 시·군당에 내려갔다”면서 “지시문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당과 인민의 노력투쟁과 건설사업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도전에 부닥쳐, 조국통일을 하지 않고는 강성대국 건설도, 사회주의 승리도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힘.
 - 이 지시문은 또 “미국과 남조선은 강성대국의 암적 존재이자 암초 같은 장애물로, 전당·전민이 총동원돼 조국통일을 앞당겨 수행하는 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선결조건”이라면서 ‘강성대국 건설’보다 ‘조국통일’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지시문은 이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장군님(김정일 지칭)의 뒤를 이을 청년대장(김정은)이 구상하고 있다”면서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청년대장을 따라 힘차게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이 지시문이 내려간 뒤로 당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시·군당의 ‘토요정세강연’에서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사라지고 ‘미제와 남조선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강성대국도 없다’는 식의 논리가 주입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주민행정법’ 등 3개 법률 제정(8/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주민행정법’, ‘노동보호법’, ‘상업회의소법’ 3개 법률을 제정
 - 통신은 “주민행정법에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들이 주민행정사업을 바로 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전함.
 -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과 살림집 보장사업, 먹는 물 보장사업, 교육교양사업, 노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 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라고



설명

- 주민행정부법 제정은 북한 당국이 오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앞두고 주민생활 향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화해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통신은 또 “노동보호법에는 노동안전교양사업과 노동보호 조건의 보장,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노동과 휴식,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을 비롯하여 국가의 노동보호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상업회의소법에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무역촉진단체인 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임무와 권한 등이 규제되어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 2004년 8월 상업회의소(KCC)를 설립했으며, 2008년 7월에는 내각에서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
 - 통신은 이번 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과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주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데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고 덧붙임.
 - 북한은 올해 초 노동정량법,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 석탄법 8개 법률을 제정
- **北, 집단탈북 막기 위해 ‘전인민 감시’ 가동(8/11,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량강도 혜산의 소식통을 인용, “전인민적 감시 운동을 벌여 탈북자의 도강(渡江)을 막으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침이 지난 7일 각 시, 군에 하달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번에 4~5명씩 움직이는 가족 단위 탈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방송은 또 “보위부가 각 인민반, 공장, 기업소에 지도원을 보내 이방침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거지를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와 주민들 사이의 감시체제가 강화됐다”면서 “보위부는 가족 일부가 탈북한 세대에서 가족 단위 탈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 행방불명자가 있는 가정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임.
 -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탈북을 막기 위해 전인민이 감시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방송은 덧붙임.
 - **北, 평양서 징용피해자 등 증언 집회(8/11, 교도통신)**
 - 북한이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증언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조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명의의 서한을 채택
 -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집회에선 징용피해자 남성과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 여성 원폭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1시간가량 식민지 시대 생활상을 증언했고, 이미 숨진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 11명의 증언을 담은 녹화 영상도 상영



- 평양 시민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 방문단, 일본 시민단체 간부 등 200명이 증언 모습을 지켜봄.
- 도야마(富山)현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중노동을 했다는 전용복(全龍福.82)씨는 “식민지 시대에 받은 고통도 크지만, 일본이 전후 6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사죄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데 대해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고, 히로시마(廣島)에서 피폭됐다는 이계선(李桂先.68)씨는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재외 피폭자 지원에서도 제외됐다”고 한탄
- 이들은 또 ‘피해자와 유족 일동’ 이름으로 “일본 정부는 65년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등에 대한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과거 청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채택
- 통신은 북한이 일본 정부에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은 6년 만이라며, 이날 집회에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나 최근 간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함.

● 北 인민보안부는 국방위 산하(8/13,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의 경찰 조직인 인민보안부가 국방위원회 산하 조직이라는 사실이 중국 발표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 홍보사이트인 중국정부망(www.gov.cn)은 12일 중국 공안부 대표단이 지난 8일 방북해 ‘경찰 물자 기증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게재하면서 북측 초청 주체를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라고 표기
- 북한 인민보안성이 인민보안부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올 4월 북한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 北 박봉주 전 총리 복권(8/15, 마이니치신문)

- 신문은 3년 전 총리에서 해임돼 지방 기업 지배인으로 좌천됐던 박봉주(71) 전 북한 총리 등 장성택(64)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 20여명이 복권됐다고 ‘평양 중추에 밝힌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2007년 기업에 시급제(時給制)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다가 비판을 받아 좌천된 박 전 총리는 최근 장씨의 부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64)가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 2인자의 자리에 오름.
- 신문은 “장씨가 2003년께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서 실각했을 때 함께 좌천된 측근 약 20명이 최근 1, 2년 사이에 모두 복권됐다”며 “그 수를 300명이라고 하는 간부도 있다”는 한 관계자의 말도 전함.



● 北김일성대 명예교수 윤기정 사망(8/1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1980년부터 약 20년간 북한의 재정을 총괄한 김일성종합대학 명예교수 윤기정(여)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일성종합대학 명예교수 윤기정이 급성심장기능부전으로 13일 81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
- 1980년 4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정무원 재정부장에 발탁된 윤기정은 이후 18년간 김일성 주석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국가재정을 집행, 이어 1999년 6월에는 경제간부양성기관인 인민경제대학 총장에 임명됐다가 1년 뒤 물러나 2000년 7월엔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명예교수가 됨.

■ 김정일동향

- 8/11 김정일, 대계도간석지건설에 기여한 일꾼들과 건설자들 41명에게 표창(8/11,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황해제철연합기업소·함흥모방직공장 등, 8/8~9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기 위한” 종업원 궐기모임진행(8/10, 중방)
- 쑥섬혁명사적지관리소 창립 20돌 기념 보고회 현지에서 진행(8/10, 중방)
- 대계도간석지 건설자 3천명에게 표창식, 8/10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족 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전달)·최종건(平北道 인민위원장)·김국영(平北道黨 비서) 등 참가下 진행(8/11, 중방)
- 평양교예단 종업원들, 8/10 안동춘(문화상)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 말씀 관철” 궐기모임 개최(8/11, 중방)

나. 경제

■ 기타 (대내 경제)

- 제13차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8/2~9 3대혁명전시관에서 2,500여건의 의학과과학기술성과자료들 출품·전시된 가운데 진행(8/9, 중통)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대적인 건설 및 연조공정 새로 완공(8/9,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조국해방 65돌 기념 소형전지 1정 및 묶음전지 1정 등 기념우표 창작(8/11, 중방)
-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투입된 군인건설자들의 하루 계획



- 200% 이상 달성, 낙랑-역포지구 공사장의 청년동맹 일꾼-건설자들의 살림집 골조공사 60% 수행 등 자랑(8/11, 중통)
- 김일성화김정일화연구센터, 김정일화를 오랫동안 피울 수 있게 하는 선도보존제 '청화' 개발(8/12, 중통)
- 신의주선박공장 일꾼-노동자들, 7월말 현재 연간계획 116% 초과수행(8/12, 노동신문·중방)

다. 사회·문화

● 北 수해지역에 설사병 확산(8/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국제적십자사(IFRC)의 첫 북한 수해현장 보고서를 인용, “최근 함경남도 신흥시의 수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대표적 수인성 질병인 설사병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노약자와 여성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불면증 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함.
- 또 “신흥시 지역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지난달 22일 다시 30분 가량 폭우가 쏟아져 마을 전체가 50cm 정도 물에 잠겼다”면서 “최소한 리 단위 진료소 4곳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임.
- 국제적십자사 측은 RFA에 “부상자들은 많지만 아직 중상자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응급약을 처방받은 환자 가운데 일부는 회복되고 있다”면서 “다리 파손 등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해져 자전거를 이용해 수해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나 아직 상당수 주민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 꾀통더위에 北 맥줏집도 북적(8/10, 조선신보)

- 평양 보통강 구역의 ‘경흥관 대동강생맥주집(경흥관 맥주집)’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음.
- 신문에 따르면 거리가 먼 곳에서 찾아올 정도로 ‘특별한 존재’인 경흥관 맥주집에는 무더위를 생맥주로 식히려는 손님이 매일 3천 500명~4천명씩 찾아오고 있음.
- 신문은 “경흥관 맥주집이 이처럼 붐비는 것은 1987년 개관 이래 처음”이라면서 “낮에는 주로 노인들과 가정주부가 오고, 저녁에는 퇴근길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많다”고 전함.

● 유니세프, 상반기 대북지원 모금 ‘제로’(8/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지난 2월 유니세프가 작년보다 23% 줄어든 미화 1천만 달러를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지만 전혀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지원받은 123만 달러로 겨우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당초 △보건 200만 달러 △식수·환경위생 300만 달러 △교육 100만 달러 등으로 예산을 배정했으나 CERF 지원금으로 보건사업만 일부 실행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유니세프의 패트릭 매코믹 대변인은 RFA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급감하면서 식량지원조차 어려워져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면서 “식수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북한 어린이의 설사병이 크게 증가했고, 영아 사망률도 높아졌다”고 말함.
 - 그는 또 “국제사회의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대북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하반기 사업도 보건과 영양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이밖에 유엔이 금년 하반기 대북 구호기금을 작년 동기보다 45% 줄여 5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대북 ‘식량안보사업’을 취소하는 등 여러 국제기구의 대북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北, 황남도 월당리서 청동기시대 집터 발굴(8/10,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리에서 ‘팽이그릇 시기’(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유적을 발굴
 - 신문에 따르면 장수산성의 외성 남문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월당리 평지대에 자리잡은 이 집자리는 동북-서남 방향으로 놓인 장방형이며 길이 520~556cm, 너비 264~296cm에 면적은 약 16.28㎡임.
 - 신문은 “집자리 움 깊이가 30~35cm이고 움벽은 곧고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진흙을 고루 퍼 다진 바닥에서 여러 가지 석기와 질그릇들이 나왔다”면서 “월당리 유적의 집자리와 유물들은 팽이그릇 시기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힘.
- **中접경지 제외 북한 전역서 휴대전화 개통(8/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달 들어 신의주 등 중국 접경 도시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통
 - 방송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달 1일부터 청진, 함흥, 강계, 사리원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 “신의주, 만포, 혜산 등 국경 도시들에도 휴대전화 기지국은 설치됐지만 서비스 개통은 보류됐다”고 말함.
 -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월 국가안전보위부가 불법 휴대전화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경 인접 지역의 휴대전화 개통을 보류해 달라’고 국방위원회에 제안했다”며 “보위부의 제지로 앞으로도 국경 도시에서는 이동전화 사용이 힘들 것”이라고 RFA에 설명
 - 방송은 “체신국(우체국)들에 휴대전화 판매소가 개설됐지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동료가 집 전화의 3배나 돼 휴대전화는 아직 과사용이나 비상통신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 **北, 어린이·임산부 보건 급격 악화(8/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의 건강 상태가 식수 부족, 의료시설 낙후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방송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2010 인도주의활동 중간점검 보고서’에서 “북한 현장을 답사한 결과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중증 영양실조가 급증할 것이라는 징후가 뚜렷했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상수도 설비와 낙후된 의료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이 설사병과 아동 사망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유니세프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2만 5천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상수도 2개를 북한에 설치하는 한편 5세 이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 7천명에게는 영양강화 우유와 즉석 영양보충제를, 임산부 20만명에게는 미량영양소 보조제를 각각 지원

- **北, 휴대전화가입자 6월말 18만명 돌파(8/13, 미국의 소리(VOA))**

 -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서비스 지역 확대에 힘입어 올 상반기 말로 18만명선을 넘어섬.
 - 방송은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올 상반기 실적보고서를 인용, “6월 말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18만 4천 531명에 달했다”면서 “이는 작년 동기(4만 7천 863명)의 4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함.
 - 오라스콤은 북한 체신성과 75대 25 비율로 투자한 합작회사 ‘고려링크’를 통해 2008년 12월부터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특히 올 2.4분기에만 5만 9천명 늘어나 분기 단위 최대 증가를 기록
 - 6월말 현재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월평균 327분으로 작년 동기(199분)보다 65%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고려링크의 매출은 작년 상반기 미화 1천2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2천319만9천달러로 86%, 세전 영업이익은 280만달러에서 1천 869만 7천달러로 567% 증가
 - 보고서는 “1년 전만 해도 평양에서만 쓸 수 있었던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이 12개 주요 도시와 22곳의 고속도로 및 철도 구간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북한 전역의 60%에 해당한다”면서 “고위 관리나 부유층, 외국인뿐 아니라 중간 계층이나 10대, 20대의 휴대전화 구입이 급속히 늘어 주요 7개 도시에서 판매대리점 10곳과 영업소 1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 **평양과기대 내달 정식개교(8/12, 연합신문)**

 - 평양과기대 개교를 준비해온 연변과학기술대학의 한 관계자는 “평양과기대가 개교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수속을 이미 완료했다”며 “다음 달 초 개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관계자는 이어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고교 졸업생 100여 명이 신학



기부터 학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며 “점차 학생 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정식 개교에 앞서 이미 지난 6월 김일성종합대학 등 명문대 졸업생 60여 명을 선발, 정보통신공학부와 농생명식품공학부, 산업경영학부 등 3개 학과의 박사과정을 개설, 운영 중”이라고 덧붙임.
- 그는 “평양과기대는 학부와 대학원을 함께 운영하지만 원칙적으로 우수한 학부 졸업생을 선발, 고급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대학원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며 “점차 보건의료학부와 건설공학부 등으로 학과를 늘리고 학생 수도 400-500명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
- 평양과기대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설립에 합의, 지난 2002년 착공식을 한 뒤 2003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년 만인 지난해 9월 완공했으며 이 대학 설립을 주도해온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과 북한 측 인사가 공동 총장으로 내정됨.

● 北중학생도 마약…‘복용자 총살’ 포고(8/13,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최근 북한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종전의 마약 제조 및 판매자뿐 아니라 앞으로는 마약 복용자도 총살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나왔다고 전함.
- 2007년 개정된 북한 형법에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밀수나 밀매 행위에 대해 사형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북한 당국이 마약복용자까지 총살한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
- 이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 9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앞으로 마약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총살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인민보안부 포고문이 발표됐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포고문이 배포됐다고 한다”면서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어른뿐 아니라 중학생들까지 공공연히 마약을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힘.
- 이어 “북한에서는 아편이나 대마초를 마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포고문의 단속 대상은 필로폰”이라면서 “주민들 사이에 ‘얼음’ 또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주로 생산된다”고 덧붙임.
- 방송은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보건성의 내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현재 필로폰을 1회 이상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주민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함.

● 평양서 5세기 고구려 벽화고분 발굴(8/14,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평양의 락랑구역 동산동에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벽화 고분이 발굴됐다고 전함.
- 통신은 현장에 학자와 취재진을 보내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측과 함께 발굴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발굴이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와 풍습, 일본 등과 문화교류 양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北, 체제선전에 트위터도 활용(8/15,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최근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체제선전에 나섬.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2일부터 트위터에 'uriminzok'(우리민족)이라는 닉네임으로 계정을 만들고,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와 함께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론평 가련한 창녀신세 ▲조국통일3대현장 등 9개의 글을 게시
- 그러나 이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사이트)'로 분류돼있어 국내에서는 접속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이 계정은 이름을 'uriminzokkiri'로, 위치는 'PYONGYANG'으로 기재했으며 15일 현재 팔로잉이나 팔로워는 없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날씨(06시 보도), 8월 9일 21~24시 사이 수풍에 56mm 폭우 및 오후와 밤에 평양에 비 소식 예보(8/10, 중방)
- 北 적십자회, 큰물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호활동 활발히 진행중(8/10, 중통)
- 대동강외교단회관 수영장 문성모(외교단사업국 국장/개관사) 참가 下 개관식 진행(8/10, 중통)
- 北 옥류관 창립(1960/8/13) 50주년 즈음 "6,800만 명에 달하는 각계층 인민들이 찾아 사회주의 혜택을 향유하고 하루봉사능력이 20배로 장성하였다"고 보도(8/10, 중방)
- "평양시 능라도에 위치한 반월도 수영장이 매일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선전(8/10, 중통)
-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빨간별>> 제7부 '낮잠시간'·<<길을 잃었던 깡장이>> 등 "어린이들 교육교양에 도움을 주는 아동영화들" 제작(8/12, 중통)

2. 대외정세

● 北, 美모니터요원에 한달만에 비자 내줌(8/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한 달 가까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온 미국 민간단체 모니터요원에게 최근 비자를 내줌.
- 익명을 요구한 이 단체 대표는 RFA에 "북한이 갑자기 비자를 내줘 곧 평양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측은 지원 물품의 정확한 분배를 약속했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말함.
- 대표는 이어 "수년간 북한에 지원해왔지만 북한 관계자들은 정확한



분배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분배가 제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정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덧붙임.

-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수년째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고 있는데 전에도 북한 측이 지원물품을 임의로 분배해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전함.

● 북한인, 中서 마약범죄로 무기징역(8/9, 제로TV)

- 북한인 1명이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방송은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중국인 3명과 함께 마약범죄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방모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
- 방씨와 중국인 타이(泰)모, 추이(崔)모, 명(孟)모씨 등 4명은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마약 521g을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자치현에서 구매해 웨이하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7월 13일 웨이하이 세관에서 히로뽕 300g을 몸속에 숨긴 채 들어오다 현장에서 체포됨.
- 법원은 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 뒤 강제추방했으며 타이씨에게도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추이씨와 명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형을 선고

● 中, 北에 경찰장비 지원 서명식(8/12, 중국정부망)

- 중국 정부가 북·중 변경지역 범죄단속을 위해 북한에 경찰용 장비를 지원
- 사이트는公安부의 류징(劉京) 公安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의 초청으로 지난 8일 방북했으며 양측간 회담에서 ‘경찰물자 기증서’에 서명했다고 전함.
- 중국 公安부의 이번 방북은 지난 6월 4일 새벽 북·중간 접경인 압록강에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들이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하다가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사이트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구체적인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양국의 公安당국간 회담에서 류 부부장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접한 우방으로, 양국간 우의는 오랜 전통으로 배양돼 왔고 최근 북중 정상간의 노력으로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公安부와 인민보안부 간의 교류와 협력도 진일보시켜 양국의 국경범죄 척결에 공동 노력하자”고 발언
- 북한 측에서는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회담에 참석했다고 정부망은



전함.

- 압록강 충격사건 발생 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랴오닝성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북한에 전달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압박
- 그와 관련해 북한은 조사결과 ‘우발적인’ 충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로인한 사망자들과 유가족에 슬픔과 애도를 랴오닝성 정부에 전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

● 北, ‘日총리 담화에 실망’(8/13, 교도통신)

- 통신은 13일 평양발로 북한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전함.
- 북한의 송일호(宋日晷.56)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이날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간 총리의 담화에는 사죄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모든 조선 인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냄.
- 송 대사는 특히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는 우리나라(북한)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모든 국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남조선(한국)만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혹평함.
- 그는 “이번 담화는 (내외 정책에서) 모순에 빠진 이명박 정권에 힘을 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성실하게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北, 폴란드 은행 통해 불법자금 송금(8/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폴란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전함.
- 폴란드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니컬러스 레비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폴란드의 ‘Kredyt’은행 계좌를 통해 폴란드 파견 노동자 수입과 함께 주류판매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산 술을 폴란드에 팔아 돈을 마련하며, 이 불법 활동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함.
- 이 은행이 속한 KBC그룹의 이사벨라 트오질로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redyt’은행은 지난 1990년 창립 이후 북한과 어떠한 경제 교류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제적인 기준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싱가포르국경절 4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8/9, 중통)
- 김영남, 파키스탄의 홍수피해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 발송(8/9, 중통)
- 중국 공안대표단(단장: '류경' 상무부부장), 8/8 평양 도착(8/9, 중통)
- 중국 청년친선 대표단(단장: '주장규'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총 서기) 평양 도착(8/9, 중통)
- 김영남, 8/9 차드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8/10,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訪北 중-조 우호방문단과 담화(8/11, 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영림(내각 총리), 중국 감숙성 주곡현 산사태와 폭우피해 관련 '호금도' 주식과 '온가보' 국무원 총리에게 위문 전문(8/11, 중통)
- 김영남, 러시아의 산불피해 관련 '메드베제브' 대통령에게 위문전문(8/11, 중통)
- 리영호 北 총참모장, 중국 공안대표단(단장: '류경' 中공안부 상무부부장)과 담화(8/12, 중방·중통)
- 北-中 청년 친선연환모임, 청년중앙회관에서 北 김철혁 비서 등 청년동맹 일꾼들과 中 청년친선 대표단 등 참가下 진행(8/12, 중통·중방)

3. 대남정세

● 北해안포 10여발 남측 수역에 떨어져(8/10,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9일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했으며 이 중 1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관할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
-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어제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으며 모두 NLL 남쪽으로 1~2km 지점에 탄착되어 세 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한은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33분 사이 해안포를 발사한 이후 추가 사격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측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고 설명
- 정부의 한 소식통은 “NLL 이남 500여m의 연평도 해상에도 1발이 떨어진 것으로 레이더 관측 결과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였으며, 이에 합참 관계자는 “연평도 쪽은 영상감시장비로 확인한 결과 해안포가 NLL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측의 해상 합동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함.
- 또 그는 “어제 오후 8시 25분과 8시 37분께 북한 연안지역에서 포성이 들렸으며 일부 조명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은 NLL 쪽으로 모두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고 말함.



- **北조평통, 한국 이란제재 동참 움직임 비난(8/1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동참 움직임을 비난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방한, 남측에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괴뢰들은 대이란 제재 가담을 정식 결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면서 “이것은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적, 반민족적 정체를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이어 “한미동맹”은 침략적인 ‘세계제패’ 전략실현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역적패당의 친미사대적 추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北대남기구 ‘2012년, 조국통일 대문 여는 해로’(8/1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13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발표, “2012년을 조국통일의 대문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촉구했다고 전함.
 - 조국전선은 8.15 광복 65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이 글에서 “통일의 시계바늘은 분열과 대결의 원시점으로 되돌려졌다”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평화를 지키며 조국통일의 세기적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총궐기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주장
 - 조국전선은 “거족적인 애국성전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통일애국세력과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와 그에 아부 굴종하는 친미사대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말함.
 - 이어 천안함 사건 등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마지막계선을 넘어섰다”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결정적으로 저지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 또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민족해방의 8.15를 통일해방의 8.15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과 오늘 조성된 사태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리키는 길뿐”이라고 주장

- **北, 한상렬 목사 20일로 귀한 연기 통보(8/1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4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고 대한적십자사측에 통보했다고 전함.
 - 장애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이날 유종하 한적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20일 오후 3시에 돌아가게 됐다”고 밝힘.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대북 금융제재, 이달하순 발표”(8/14)

-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이달 하순 발표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북수의 정부소식통은 “미국 내부의 검토와 행정적 준비절차에 시간이 걸려 발표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달 하순에 가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지난 1~3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 제재조정관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부터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북 추가 금융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 준비에 착수했음.
-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내 언론에 “2주 이내에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대북제재 조치 내용과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이미 큰 틀에서 제재대상 리스트와 제재추진 방향이 나와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제재를 제대로 운용하느냐이며 이는 외교적 협조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이달 하순으로 예상됐던 아인혼 조정관의 방중 일정도 9월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인혼 조정관의 방중 이전에 한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 대북 제재조치 발표 일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와 대이란 제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대 이란제재의 경우 정부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토대 위에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北 도발 권력승계 관련 우려”<NYT>(8/14)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천안함 공격 등 북한의 최근 도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음. NYT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샌프란시스코의 해병대 기념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삼남 김정은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는 미 행정부 내부의 분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음.

- 게이츠 장관은 이 연설에서 지난 3월 한국의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으로 하여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뤄진 권력승계를 위한 투쟁의 차원으로 보면서 “천안함 침몰과 같은 도발의 배후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신문은 게이츠 장관이 특히 질의응답과정에서 북한의 권력승계작업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천안함 공격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미군 지도자들의 우려를 되풀이했다면서 한국어선 대승호 나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 경고를 예로 들었음.
- 신문은 이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이 9월 초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모습을 나타내거나 국방위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이후 2012년 김일성 전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권력승계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와 관련,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과거 김정일이 권력을 계승하는 작업은 10여 년간에 걸쳐 김일성이 권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형태로 이뤄졌던 반면, 김정은이 현재 독자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음.

● “미국방장관, 北-헤즈볼라 무기거래”<RFA>(8/14)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 게이츠 장관은 13일(현지시각) 미 해병대 기념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은 미얀마,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과 무기류 밀수출을 계속해 왔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소개했음.
-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오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동안 미국 의회나 연구기관에서 북한이 헤즈볼라, 하마스, 하마스 등 군사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됨. 미 국방부 관계자는 게이츠 장관의 발언이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뜻하느냐는 RFA측의 질문에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 달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2009테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주시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美국무부 “고위인사 방북 제의 몰라”(8/12)

-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국적의 아이잘론 말리 곱즈씨 석방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제안했으



나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요구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그 같은 (북한의) 요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

-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정부가 고프의 신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음.

● “美, 北의 ‘고위인사 방북’ 제안 거부”<RFA>(8/11)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중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씨의 신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했다. 이 방송은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는 두 여기자 석방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갔던 것처럼 고위급 인사를 보내 고프씨를 데려올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의 제안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미 국무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지난 2일 우리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차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고프씨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직접 접촉해왔다’고 언급한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RFA에 우회적으로 답했음.
- 미 의회 관계자는 또 “고위급을 파견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에 동의하지만 고프씨 문제가 미북간 대화 재개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고프씨의 신병에 대해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고프씨는 지난 1월 북·중 국경으로 무단 월북해 억류된 뒤 4월 재판에서 8년의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받았음.

● 美, 北 해안포 발사에 우려 표명(8/10)

- 미국은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의 북한군 해안포 발사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호가 아니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이는 도움이 되는 신호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건은 정확히 우리가 북한이 피하기를 바라던 행동”이라고 비난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 지역에 매우 많은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확실히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북한에 의한) 좀 더 많은 도발들을 볼 것이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좀 더 많은 도발들을 볼 것 같다는 것”이라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상했음. 그는 “우리가 북한에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도발들에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



면서 “북한은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우리는 대북제재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며, 북한이 노선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넣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런 허풍(chest-thumping)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국 및 역내 다른 국가들과 효과적이고 긴밀히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과 이런 도발들에 대해 북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북한에 되풀이해서 전했다”면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이웃 국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길을 찾고, 긴장을 완화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에 의해 8일 나포된 경북 포항선적의 오징어 채낚기어선인 ‘55대승호’ 사건과 관련, “그들(북한)이 공해에서 어선을 나포해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이 같은 언급이 대승호의 정확한 나포 위치가 좌표상 공해상임을 시사한 언급인지는 분명치 않음. 이와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한국이 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빌 버튼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즉각적인 반응은 피한 채 “그 지역이 안정되도록 모두가 확실히 하기를 베풀 오바마 대통령은 명백히 원한다”는 원칙적 언급을 내놓았음.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해안포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의미를 일축하려는 듯 “그것(해안포 발사)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죽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조크’를 던지며 “PETA(미국의 동물보호단체·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이)가 항의하기를 확실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자들이 진심인지를 묻자 북한의 도발중단을 촉구하는 진지한 대답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음.

● “北, 美모니터요원에 한달 끝다 비자 내줘”<RFA>(8/9)

- 북한 당국이 한달 가까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온 미국 민간단체 모니터요원에게 최근 비자를 내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단체 대표는 RFA에 “북한 측은 갑자기 비자를 내줘 곧 평양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측은 지원 물품의 정확한 분배를 약속했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 이 대표는 이어 “수년간 북한에 지원해왔지만 북한 관계자들은 정확한 분배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분배가 제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정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단체는 지난 6월 북한 남포항에 지원물품을 보낸 뒤 북측의 요구대로 중국의 북한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북한 측은 심사기관 안에 반대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남포항에 도착한 식량과 의약품은 한달 넘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RFA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수년째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고 있는데 전에도 북한 측이 지원물품을 임의로 분배해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김정일 방중때 식량 100만t 지원 요청”(8/13)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인프라 투자 100억 달러, 식량 100만t 지원을 요청했었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초 방중 당시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중 국경지대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100억 달러의 투자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신문은 또 “인프라 투자와 별도로 식량 100만t과 석유 80만t을 연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한국의 통일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약 130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 대해 중국은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보도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2006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만의 중국 방문에서 김 국방위원장은 중국 측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으려 했으나 한일 양국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中, 北에 경찰장비 지원 서명식(8/12)

- 중국 정부가 북중 변경지역 범죄단속을 위해 북한에 경찰용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홍보사이트인 중국정부망(www.gov.cn)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망은公安부의 류징(劉京)公安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의 초청으로 지난 8일 방북했으며 양측간 회담에서 ‘경찰물자 기증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 중국公安부의 이번 방북은 지난 6월 4일 새벽 북중간 접경인 압록강에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들이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하다가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이트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구체적인 경찰 장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양국의公安당국간 회담에서 류



부부장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접한 우방으로, 양국간 우의는 오랜 전통으로 배양돼 왔고 최근 북중 정상간의 노력으로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공안부와 인민보안부 간의 교류와 협력도 진일보시켜 양국의 국경범죄 척결에 공동 노력하자”고 발언했음.

- 북한 측에서는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회담에 참석했다고 정부망은 전했다. 압록강 총격사건 발생 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랴오닝성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북한에 전달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압박했음. 그와 관련해 북한은 조사결과 ‘우발적인’ 총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로 인한 사망자들과 유가족에 슬픔과 애도를 랴오닝성 정부에 전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음.
-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경찰물자 지원을 계기로 양국이 국경경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탈북자 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中 언론 “10대 금기지역에 노동당 39호실”(8/10)

- 중국 언론이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을 세계 10대 금기지역 중 하나로 꼽으며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음.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은 10일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을 세계 10대 금기지역 중 4위로 꼽으며 북한의 최고 기밀조직 중 하나라고 소개했음. 환구망은 이곳은 소위 김씨 가족 왕조의 정치경제적 명운이 걸려 있는 곳으로 비밀조직이긴 하지만 대중들은 중국과 스위스에 10~20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위조와 돈세탁 및 다른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 일부 인사들은 39호실이 마약밀수 및 불법 무기거래에도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단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환구망은 김정일 위원장의 관할 하에 120개 합법적인 대외무역회사도 있다면서 39호실은 북한 수도 평양의 모 노동당 건물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대중성을 중시하는 국제뉴스전문지인 환구시보 인터넷판이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베일에 싸인 곳을 추측을 곁들여 소개했음.
- 이 기사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에도 게재돼 있고 신화통신 인터넷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환구망의 기사를 출처를 밝히면서 전제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임.

● “북한인, 中서 마약범죄로 무기징역”(8/10)

- 북한인 1명이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중국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 중국 산둥(山東)성의 언론 사이트 제로망(齊魯網)과 제로TV 채널은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중국인 3명과 함께 마약범죄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방모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보도했음.



- 방씨와 중국인 타이(泰)모.추이(崔)모.명(孟)모씨 등 4명은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마약 521g을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자치현에서 구매해 웨이하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7월 13일 웨이하이 세관에서 히로뽕 300g을 몸속에 숨긴 채 들어오다 현장에서 체포됐음.
- 법원은 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 뒤 강제추방했으며 타이씨에게도 유기징역을 선고했음. 또 추이씨와 명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형을 선고했음. 이들 일당은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됐으며 중국 공안은 이들이 4개국을 넘나드는 국제마약범죄 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올해 3월에도 북한인 5명, 한국인 2명, 조선족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마약판매조직을 검거한 바 있음.

● 中, 北해안포 발사 사실 보도(8/10)

- 중국 언론들은 9일 오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해안포 130여발을 발사한데 대해 논평 없이 사실 보도만을 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한국 국방부 대변인실을 인용, 북한의 해안포 발사 사실을 즉각 보도했고 다른 언론매체들은 신화와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하며 큰 관심을 보였음.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NLL이 남북간의 분쟁 해역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한국군이 이날 5일간의 서해 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날인 이날 해안포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0일 오전 현재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은채 침묵을 지키고 있음.

● 中, 대승호 중국선원 인도적대우 北에 요구(8/9)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은 9일 3명의 중국선원이 탑승한 한국 어선이 북한에 의해 나포됐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음. 주북 중국총영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청진에 있는 중국총영사관은 대승호 나포와 관련한 한국 언론 보도를 주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중임. 중국총영사관 관계자는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국 선원을 인도적으로 잘 대우해 줘야 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중국 측에 이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음. 경북 포항선적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55대승호에는 지난 8일 나포 당시 4명의 한국 선원 및 3명의 중국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일·북 관계

● “김일성, 71년 당시 ‘일본이 최대 위협’”(8/14)

- 북한의 고(故) 김일성 주석이 1971년 당시 아시아와 한국에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이 신문



은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우드로윌슨센터가 입수한 루마니아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71년 6월 북한을 방문한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에서 “남조선에서 친북한 혁명세력이 대두해 정정이 불안해질 경우 개입할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밝혔다.

- 김 주석은 당시 그 근거로 일본 자위대 간부의 빈번한 한국 입국, 한국에 대한 외국 투자의 20%가 일본이라는 점 등을 들고, “(한국의 친북한) 반란세력은 일본에 의해 진압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주석은 또 “남조선에서 현재 최대의 위협은 일본이며 일본은 아시아의 위협이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장래 일본의 군국주의와 싸울 수단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北 “日 총리 담화에 실망” <교도> (8/13)

- 북한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평양발로 보도했음.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북한과는 국교 정상화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송일호(宋日昊.56)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이날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간 총리의 담화에는 사죄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모든 조선 인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음.
- 북한이 일본의 총리 담화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임. 송 대사는 특히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는 우리나라(북한)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모든 국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남조선(한국)만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혹평했음.
- 그는 “이번 담화는 (내외 정책에서) 모순에 빠진 이명박 정권에 힘을 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성실하게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일본 민주당 정권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음. 송 대사는 “민주당 정권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민당 시대의 갖가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제1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2008년 8월 중국 선양(瀋陽) 합의는 자민당 정권이 파탄 낸 만큼 새로운 각도에서 출발해야 하고, 납치 문제에서 의문점이 있더라도 관계 개선 과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 교육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금까지도 제재를 해왔고,



(추가 제재를 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6자 회담은 평등한 입장에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이에 대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북(북일)간에는 국교가 정상화 돼있지 않다. (식민지 지배의 영향은)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전후 문제에 대해 일북간에는 일한(한일)기본조약 같은 것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선 법적 청산을 한 뒤에야 사죄 담화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됨. 그는 또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 사죄 담화를 요구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해감을.

● 日, ‘조선총련 공익기관 아니다’ 과세(8/12)

-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에 있는 조선총련 관련 시설에 대해 모두 고정자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조사결과 조선총련 관련 시설이 있는 일본 전국의 130개 시(市)·초(町)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고정자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무성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전국 65개 시·초가 조선총련 시설에 대해 자산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이후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면세 혜택이 사라졌음.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의 경우 일본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총련 시설에 대해 작년까지 자산세를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현지 조사 결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세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음.

마. 기 타

● “北, 폴란드 은행 통해 불법자금 송금”<RFA>(8/14)

- 북한이 폴란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 폴란드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니컬러스 레비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폴란드의 ‘Kredyt’은행 계좌를 통해 폴란드 파견 노동자 수입과 함께 주류판매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산술을 폴란드에 팔아 돈을 마련하며, 이 불법 활동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은행이 속한 KBC그룹의 이사벨라 트오질로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redyt’은행은 지난 1990년 창립 이후 북한과 어떠한 경제 교류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제적인 기준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다는 주장은 사



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음.

- 폴란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완성한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계좌가 있는 8개 유럽국가에 포함됐고, ‘Kredyt’은행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유엔 제재 1874호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연합개발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해외 21개 은행 중 하나로 지목됐음.
- RFA는 “폴란드 정부가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니세프, 상반기 대북지원 모금 ‘제로” <RFA>(8/11)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지원 자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했다. 방송은 “지난 2월 유니세프가 작년보다 23% 줄어든 미화 1천만 달러를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지만 전혀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지원받은 123만 달러로 겨우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니세프는 당초 △보건 200만 달러 △식수·환경위생 300만 달러 △교육 100만 달러 등으로 예산을 배정했으나 CERF 지원금으로 보건사업만 일부 실행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유니세프의 패트릭 매코믹 대변인은 RFA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급감하면서 식량지원조차 어려워져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면서 “식수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북한 어린이의 설사병이 크게 증가했고, 영아 사망률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대북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하반기 사업도 보건과 영양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엔이 금년 하반기 대북 구호기금을 작년 동기보다 45% 줄여 5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대북 ‘식량안보사업’을 취소하는 등 여러 국제기구의 대북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계 미국학생, 판문점 평화숲 만들러 방북(8/10)

- 어린이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 학생 조너선 리(13·한국명 이승민)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을 제안하러 방북함.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판문점에 어린이 평화숲을 조성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조너선 리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전하러 10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출국에 앞서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조너선 리는 “중국을 방문한 다음 김정일 위원장에게 평화의 숲 조성을 건의하러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미 북한 정부의 입국 허가도 받아냈



다”고 말했다.

- 조너선 리가 판문점에 조성할 것을 제안한 어린이 평화숲은 남북한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일종의 놀이동산임. ‘정치와 분쟁을 넘어서, 국경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과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평화숲의 지향점임. 조너선 리는 각국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북한이 60년 동안 갈라져 있었던 탓에 남북의 어린이는 서로 만날 수도, 함께 놀 수도 없다”며 “남북한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상징으로 판문점에 평화의 숲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음.
- 한국계 미국인인 조너선 리는 2007년부터 인터넷에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만화 ‘고 그린맨(G● GREENMAN)’을 연재해 CNN과 워싱턴타임스에 소개되는 등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음. 그는 ‘어린이 한 명당 일 년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자’는 운동을 펼쳐 어린이 환경운동가로 유명세를 탔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환경운동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음.
- 그가 남북문제에 관심을 두게 것은 2007년 6·15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장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감명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염원을 듣고 남북한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길을 궁리하다 어린이 평화숲을 떠올리게 됐음. 그는 “북한에 간다고 하니 조금 긴장도 되지만 용기를 가지고 평화의 숲을 제안하고 싶다”며 “북한 정부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판문점에 평화의 공간이 들어설 것”이라고 당차게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오바마 “對韓 방위공약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8/1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안보와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8.15 광복절을 앞두고 발표한 축하 성명을 통해 “8.15 광복절을 맞아 미국 국민을 대신해 한국에 축하를 전하고, 미국 및 전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축하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지난 62년 동안 우리 양국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맹을 향유해 왔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동의 믿음에 의해 한데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0년 전 공산군들이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다”면서



“지금처럼 그때도 우리의 동맹은 필요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이곳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은 산업에서 과학, 스포츠, 예술, 공공서비스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조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축하성명을 통해 광복절을 맞는 한국 국민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더욱 깊어진 양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임.

● 오바마, ‘한국 이란제재 동참’ 직접 챙겨(8/12)

- 한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의 결정 방향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층에서 직접 지속적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929호 결의와 미국의 이란제재법 통과 이후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의 참여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키(key)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함.
- 유럽의 강력한 추가 제재 동참을 얻은 상황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틈새를 활용해 이란 시장을 공략해 온 한국, 일본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구멍’을 막은 뒤 마지막으로 중국을 집중 공략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란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하기는 더더욱 힘들어 진다는게 미국의 판단이라는 것임. 일본은 이달 초 이미 이란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결정한 상태임. 미국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의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백악관 등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한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워싱턴의 소식통은 “이란제재는 백악관의 최대 관심이자 현안”이라며 “미 고위층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이란 제재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당시 열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도 최근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얘기해 온 문제”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란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 의회도 한국의 제재 동참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미 상·하원 의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란 제재에 한국 정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의회 소식통이 전했다.



● “정부, 이란제재 이행보고서 안보리에 제출”(8/9)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이란 제재결의안 1929호에 의거해 지난 6일 ‘이란제재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음. 정부 고위소식통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지난주 대이란 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말했음.
- 현재 1929호는 31조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통과 60일 이내에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재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제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란제재 결의 성실히 이행”..이행보고서 제출(8/9)

-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 1929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6일 포괄적 제재추진 방향을 담은 ‘이란제재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음. 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독자제재의 경우 관련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초 미국의 시행세칙 발표를 전후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이미 지난주 대이란 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또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성실히 수행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음. 현재 1929호는 31조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통과 60일 이내에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제재 진행상황과 함께 향후 포괄적인 제재추진 계획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김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가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독자제재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 정부의 시행세칙이 10월초까지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 김 대변인은 이어 대이란 제재에 따른 기업피해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는 이란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경제분야 협력을 이뤄왔다”며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별적인 우리 기업의 활동이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제재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한미훈련, 충돌 야기 우려”(8/12)

- 중국이 “한·미 군사훈련으로 긴장국면이 조성되면 더 큰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한미 훈련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음. 중국 공산당 내 한반도 정책 총괄 책임자인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 부장은 11일 한국 국회의원 방중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긴장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방중대표단 측이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혔음. 중국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중국 고위 관리를 통해 ‘충돌’이란 표현이 나온 것은 이례적임.
- 왕 부장은 특히 최근 동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훈련이 진행된 데 이어 조만간 서해 훈련에도 미 항모가 참가한다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왕 부장은 “천안함 사태 초기에 한국에 대한 네티즌들의 동정 여론이 일었는데 군사훈련 실시 후에 네티즌들의 태도가 싸늘해졌다”면서 “특히 실제로 서해에 미국 항모가 들어올 경우 이젠 중국 인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지도부는 한국 의원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 천안함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왕 부장은 면담에서 “중국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위로의 말을 전한 바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안함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은 늘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 왕 부장은 “남북한은 형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긴 흐름속에서 서로 화해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많은 곤란이 있지만 6자회담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 자 주석은 이어 “중국이 열심히 설득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이 가장 적합한 길인 바,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혁개방문제에 대해 왕 부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상황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면서 “중국은 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자 주석은 한중 관계와 관련, “지난 18년간 전면적으로 빠르고 심도 있게 발전해왔으며,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현황에 매우 만족하며 그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미 4~6월에 매달 한번씩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오는 11월 한국에서의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자 주석의 발언 후 왕 부장은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의원의 이번 방중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한중친선협회(회장 이세기)가 1996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온 의회·정당간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됐음. 대표단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강길부 윤상현 박보환 김영우(이상 한나라당) 백재현(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김을동(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으로 구성됐음.
-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중국 지도부와 면담을 소개한 참석 의원 중 일부는 “중국 지도부의 한미 훈련에 대한 입장 표명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소수 의원은 중국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중국에 도착해 칭다오(靑島) 방문에 이어 베이징에서 자 주석과 왕 부장 등을 면담했으며 주중한국인회, 베이징 현대자동차 등을 둘러본 후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도 자칭린 주석이 11일 한국 국회의원 방문단을 면담한 가운데 “한중 양국이 전략적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의 차원을 더욱 발전시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이날 보도했음.

● 中 “천안함사건 종지부찍기를 기대”(8/12)

-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 천안함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정치협상회의 주석과 공산당내 한반도 정책 총괄 책임자인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이 11일 한국 국회의원 방중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대표단측이 12일 공개했음.
- 왕 부장은 면담에서 “중국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여러차례 위로의 말을 전한 바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종지부의 계



소장은 “누군가가 내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누군가 내게 해를 입힌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 한미연합훈련에 나름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음.

- 워 소장은 “중국 인민과 군대에 관한 한 이 같은 발언은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다. 워 소장은 이 같은 대응이 어떤 형태가 될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최근 동부 해안에서 일련의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이례적인 수준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등 반응을 보여왔음. 중국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음.

다. 한·일 관계

● 日, 李대통령 ‘한일 미래’ 강조에 관심(8/15)

- 일본 언론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일 양국은 새로운 미래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음. 지지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100년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타전했음. NHK 방송도 한국측이 일본의 총리 담화를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했다고 전했고, 민영방송인 니혼TV는 이 대통령이 특히 간 총리의 담화에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언급한 점을 보도했음.
- 산케이신문도 이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 응답해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호소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 신문 계열 민영방송인 후지TV는 서울발 리포트를 통해 한국이 여전히 개인 피해자 보상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음.
- 이 대통령이 밝힌 3단계 통일안과 ‘통일세’ 신설 구상에 관심을 쏟은 언론도 있었음.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3단계 남북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통일세’ 창설 구상을 밝혔다는 점을 속보로 전했음. 통신은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통일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리는데 주목하며 “천안함 사건으로 고조된 남북 긴장을 완화해 대결에서 대화로 서서히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덧붙였음.

● 日, 각료 전원 야스쿠니 참배 안 해(8/15)

- 일본 민주당 정권이 집권 후 처음 맞은 8월15일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靖國) 신사 대신 전몰자 묘원에 가는 것으로 이전 정권과의 차이를 드러냈음.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도의 지도리가후치(千鳥ヶ淵) 전몰자 묘원을 방문해 납골당에 헌화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음. 간 총리는 물론 각료, 부대신(차관), 정무관 등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러 가지 않았음. 일본 각료 전원이 8월15일



에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은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임. 이는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배려하는 것은 물론, 자민당 정권과의 차이를 국내외에 호소하려는 의도라고 교도통신은 풀이했음.

- 간 총리는 이후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역대 총리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고 가해 책임을 언급했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세계 영구 평화의 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음.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역사를 돌아보고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며, 전(全) 국민과 함께 전화(戰禍)로 쓰러진 이들에 대해 진심으로 추도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음. 한편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와 오시마 다다모리 간사장,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음.
- 또 민주당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郎) 참의원 의원 등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속한 여야 의원 41명이 집단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1명, 자민당 26명, 국민신당 1명, 다함께당 1명, 일어나라일본 2명이었음. 아베 전 총리는 각료 전원이 참배하지 않은 데 대해 “각료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총리가 정한 방침이라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음.
- 일본이 1869년에 만든 도쿄 쇼콘샤(招魂社)가 전신인 야스쿠니신사는 강화도 사건, 조선 의병 진압, 태평양전쟁 등 각종 침략 전쟁 과정에서 숨진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1978년 10월에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 14명까지 몰래 합사해놓았음. 앞서 간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총리나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임 중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되풀이해 표명했고,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각료의 공식 참배를 자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음.

● <李대통령, 日총리 담화에 ‘화답’>(8/15)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한·일 관계로 볼 때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지난 10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한 ‘화답’의 성격을 띠고 있음.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만을 향해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표한 데 대해 ‘진일보한 노력’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임. 이는 간 총리의 이번 담화가 비록 국민적 기대에 미흡하기는 했으나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진정성과 성의를 대내외에 진지하게 보여준 점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이 대통령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는 표현을 적시한 것은 일본이 간접적으로나마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한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같은 화답의 의미와 맞물려 이번 경축사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래’임. 과거를 정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는 게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임. 이는 간 총리가 담화문의 절반을 ‘미래’에 할애하며 한·일 공동 파트너십 구축을 주문한 데 대한 답신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동안 과거사에 발목 잡혀 수시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던 한일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큰 틀에서 양국이 미래를 키워드로 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는 통치권자의 일관된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분석임.

- 이 대통령이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는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임.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마음을 열고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아직 선결조건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밝혔음. 과거사 미완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메시지임. 이 대통령은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간 총리 담화가 나름대로 진정성과 성의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강제병합의 고통과 아픔을 겪은 한국민들의 가슴에 진정으로 와 닿으려면 담화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이행하라는 주문인 셈임. 특히 일본이 여전히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이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과거사 미결과제들을 ‘행동’으로 정리하라는 주문을 제시하며 공을 다시 일본 측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대통령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 할 바른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바로 이런 맥락임.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의 움직임이 주목됨. 특히 간 총리가 밝힌 조선왕실의례를 비롯한 한반도 유래 도서 반환을 위한 양국 간 문화재 반환 협상의 진행 양상은 향후 양국 관계를 가늠해 보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기초를 유지하며 전향적으로 임한다면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임.
- 그러나 일본이 반환 대상 문화재의 조건을 까다롭게 선정하는 등 향후 협상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일 관계의 모처럼 조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임. 정부 당국자는 “8.15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간 총리 담화에 화답, 양국간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면서 “과거사 미결현안에 대한 일측의 적극적 해결 노



력 등 서로 실천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日 야당 총재 “병합조약 유효하게 체결” 답화(8/15)

-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총재가 ‘한국병합조약은 유효하게 체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제국 국민에게 고난을 안겼다’는 내용의 8.15 답화를 발표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15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답화에서 “한국병합조약의 국제법적인 평가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국강제병합 100년 사죄 답화에서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뜻에 반(反)해 이뤄졌다”고 밝힌 뒤 병합조약 무효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병합조약은 유효하게 체결됐지만 이후 조선의 독립이나 한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일본 정부의 해석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다니가키 총재는 이 답화에서 “그 후 많은 희생을 일으켰고, 대한제국 국민이었던 분들에게 큰 고난을 안겼다는 점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용기와 진지함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며 결과적으로는 고난을 안겼다는 1995년 무라야마 답화의 논리를 되풀이했음.
- 또 다른 야당인 ‘일어나라 일본’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赇夫) 대표는 8.15 답화에서 “전후 65년이 지났지만 총리가 당당하게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며 간 내각의 각료 전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데 불만을 나타냈음.

●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 추진”(8/12)

- 한·일 양국 학계인사들이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의 미래 공동 비전을 담은 ‘한·일 신시대 보고서’를 조만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회동해 ‘신시대 공동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할 경우 이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합의한 ‘신 한·일 파트너십 선언’보다 훨씬 큰 의미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됨.
-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국 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양국의 미래공동 비전을 연구해왔고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완성될 예정”이라며 “양국 학계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이 신시대 공동선언을 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를 좋은 의견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도 “학계로서는 당연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하영선 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小比木政夫) 게이오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이달 중·하순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이를 청와대에 일본 총리실에 각각 제출하고 양국 정상이 이르면 이달말 회동해 ‘한·일 2010 신시대 공동선언’을 할 것을 제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오는 17일 도쿄에서 회동을 갖고 보고서 최종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도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국 정상이 회동해 이를 공동 선언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모임에 관여하는 한 교수는 “양국 지도자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달 말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게 학자들의 생각”이라며 “이는 한·일관계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시대 공동연구가 마련 중인 보고서는 모두 30쪽에 달하며 한·일 양자관계,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 글로벌 차원의 공동비전과 협력에 걸쳐 20개의 항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학자들은 과거사 논란의 핵심인 강제병합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막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신시대공동연구는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작년 2월 정식 발족했으며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3개 분야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 “총리담화 부정 행태 중지부 찍어야” <아사히>(8/11)

- 일본 언론은 우익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11일자 사설에서 “총리 담화로는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와 관련 ‘정치적·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의 뜻에 반(反)했으며 민족의 자긍심에 큰 상처가 됐다’고 밝혀 한국민의 심정을 배려한 것은 공감할수 있는 인식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썼음.
- 사설은 이어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한 것이긴 해도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국가지도자가 역사인식을 밝히고 미래를 향한 기대와 방침을 재차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화해와 신뢰 획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음. 그러나 “자민당 등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담화에 대한 반대와 신중론이 있었고 보수계 의원 그룹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는 성명을 냈다”면서 “이는 알고 옳지 않은 인식”이라고 비판했음. 사설은 “과거에도 총리담화가 나왔지만 자민당과 각료 중에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와 일본의 진의를 의심받았고 외국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하고 “이젠 이런 행태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총리가 담화에서 밝힌 메시지가 한일 관계에 가로놓인 역사문제를 누그러뜨려 양국의 협력관계로 이어진다면 일본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음. 사설은 이어 “양국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경제관계의 심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음. 사설은 또 “상호 견해가



달라도 과도하게 정치문제화하지 말아야 하며 주장할 것은 하되 양금을 남기지 말고 무슨 일이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신뢰가 있다면 진정한 미래지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않겠느냐”고 조언했음.

-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자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후(戰後)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총리 담화에 대한 반대와 신중론이 있었지만 실제 담화에서는 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을 피했다”면서 “이는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 사설은 “한일병합으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양국은 무역이 확대되고 연간 500만명이 왕래하고 있다”면서 “외교 안전보장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납치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공조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총리 담화를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음.

● <日총리담화> 민단 “재일한국인 언급 없어 유감”(8/10)

-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단장 정 진)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제병합의 결과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국인의 역사와 처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음.
- 민단은 또 “병합조약의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바란다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평가하고 싶다”며 “이를 계기로 재일한국인의 숙원인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양국이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日총리담화> 日언론 ‘통절한 반성’ 부각(8/10)

- 일본 언론들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와 관련, ‘통절한 반성’과 ‘식민지 지배가 한국 민족에 상처를 줬다’는 내용을 부각시켰음. 아사히신문은 10일 “한국병합 ‘통절한 반성’” 제하의 석간 1면 머리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 식민지 지배의 반성과 미래지향의 일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총리 담화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이전에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이번 총리 담화는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으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의 고이즈미 담화가 아시아 여러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간 총리의 담화가 “한국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힌 것은 미래지향의 일한관계 구축을 위해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또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아시아 국



가의 신뢰를 회복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국익에도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음. 마이니치신문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 제하의 석간 1면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다시 표명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일한병합 ‘통절한 반성’” 제하의 석간 1면 기사에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규정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총리가 담화에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한 식민지배로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표현한 것은 한국 국민의 감정을 배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총리 담화의 배경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중시 자세를 내외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과의 관계강화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존재감을 높여 중국과 핵·미사일·납치문제 등을 안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이들 언론은 이번 총리 담화로 개인보상과 청구권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미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담화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음.

● **李대통령 “日, 행동으로 실천 중요”(8/10)**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식민지 지배 사과 담화’ 발표에 대해 “앞으로 일본이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담화문의 진정성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양국간 현안이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지혜롭게 협력해 가자”고 말했음.
- 간 총리는 “일본 내각의 결정을 담은 담화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 소회도 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어 전화를 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담화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담화문 내용이 간 총리 본인의 뜻일뿐 아니라 내각 구성원과 충분히 상의한 ‘일본의 뜻’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 실천 방향과 관련해서는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간 총리는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양국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실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음.
- 한일 정상회담의 이날 전화통화는 간 총리가 걸어온 것으로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이뤄졌음. 앞서 간 총리는 오전 내각회의 직후 발표한 담



강연에서 게이츠 장관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최근 도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유일한 도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음.

- 그는 또 북한의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 대한 무기 밀매를 계속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에는 이것이 매우 힘든 국가안보 문제”라고 밝혔음.

● “中, ‘北뽀주기’ 자문해봐야”(8/13)

- 랄프 코사 미 CSIS 퍼시픽포럼 소장은 13일 “중국이 봐줘서 북한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북아 안정을 이루는 게 가능한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음. 코사 소장은 이날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 주최 ‘포스트 천안함 지역안보’ 심포지엄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중국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고 점점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중국은 동북아시아 안정을 최우선시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핵의 비확산은 뒷전”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이어 “한국의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실시된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북한에게 더 이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중국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지도자인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을 중국식 개혁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사망 후 차기 지도자가 들어선 뒤 최상의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코사 소장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이 지난해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 권력이양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며 “아마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북한 군부의 지지를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음. 그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6자회담이 진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며 “김정일은 정권 생존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음. 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작년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실망을 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6자회담 회원국들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는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음.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최근 유엔사와 북한군 간 실무회담은 관련국들이 천안함 사태를 넘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출구전략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코사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천안함 후속대책을 논의하면 좋겠다”



고 제안했음.

- 반면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반복적인 관용과 조기 출구전략은 북한을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음.

● 美 국무부 차관보 내주 방중(8/13)

- 미국 국무부의 아르투로 발렌수엘라 중남미 담당 차관보가 오는 16~2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3일 보도했음. 통신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의 발표를 인용, 발렌수엘라 차관보가 중국과의 중남미 사무에 관한 제4차 정례대화 참석차 베이징과 상하이(上海)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 발렌수엘라 차관보는 중국 정부의 고위관료와 언론인, 재계 총수, 저명한 학자 등과 두루 만날 것이라고 토너 부대변인은 소개했음. 발렌수엘라 차관보의 이번 방중은 지난 2006년 이후 3차례 열린 바 있는 양국간 중남미 사무에 관한 정례협의체 참가가 주목적이지만 최근 군사훈련 등을 놓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됨.
- 베이징 외교가는 양국 고위급 관료들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최근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미·중 간 갈등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과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구글 사태 등으로 갈등을 빚다 4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최근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 “中, ‘김정일 건강 안 좋아’ 美에 전달” <日紙>(8/12)

- 지난 5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한 직후 중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도쿄신문이 12일 서울발로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후 한국에는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측에는 지난 6월 이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 신문은 한국이 미국을 통해 중국의 이 같은 판단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또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평양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 멀린 “서해는 공해..항모 작전 펼칠 것”(8/12)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9일(현지시간) 서해가 중국의 사실상의 영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서해는 공해(international waters)”라고 강조했다. 멀린 의장



은 이날 미군 장병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이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훈련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에도 그 항모가 그곳(서해)에서 작전을 했고, 다시 그곳에서 작전을 펼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우리는 확장된 영해에 대한 어떤 누구의 견해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해를 항상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북한 지도부에 대해 “상당히 예측할 수 없고, 위험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북한이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한 뒤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와 함께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초점”이 북한 문제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음. 한편 멀린 의장은 이날 동해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로, 서해는 서해(West Sea)와 황해(Yellow Sea)로 각각 언급했음.

● 中언론 “美-베트남 훈련은 中 견제용”(8/12)

- 중국 언론이 미국과 베트남의 연합군사훈련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음.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최근 미국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이 베트남 항구에 도착해 조만간 시작되는 양국 해군 간 첫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배경에는 자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음. 또 현역 인민해방군 소장이 “베트남은 미국과의 군사교류 강화를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
- 환구시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미 항모인 조지 워싱턴호가 동해를 거쳐 남중국해에 진입한 뒤 나중에는 서해로 이동한다는 것은 특수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와 시위를 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미국과 베트남이 협력해 중국에 맞서는 이번 상황은 걸로 보기에 중국이 굴기에 대한 결과이자 대가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신문은 미국의 최근 조치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최근 정세를 겁낼 필요없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인 양이(楊毅) 국방대학 교수는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국가에 항모를 파견해 잇따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 자국이 가장 강하며 어떤 국가도 자국의 군사패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환구시보는 이날 스위스 취리히은행의 베이징대표처 류즈친(劉志勤) 수석대표가 쓴 별도의 칼럼에서 “한미 군사훈련 등 최근 미국의 행동은 아시아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봉황망(鳳凰網)도 이 날짜 기사에서 “과거 적국이던 양국간 역사



상 최초의 해군 합동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미 항모 외에 290명의 병력을 태운 구축함 존 매케인호가 10일부터 중부 다낭 항을 방문, 이미 양국간 군사교류가 시작됐다고 전하고 이번 훈련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훈련의 이면에 미국이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중국간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에 베트남과 핵협정을 추진, 중국의 강한 반발도 산 바 있음. 양이 소장은 봉황 위성TV에 출연, 베트남이 미국을 끼고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려 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양 소장은 “미국이 베트남과 군사훈련을 하는 목적은 베트남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면서 “베트남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미국은 냉전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했고 냉전시기 좋은 친구였던 파키스탄이 필요가 없게 되자 파키스탄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 <美中 긴장 속 베트남-美 군사교류 강화>(8/10)

- 남중국해와 주변 영토 분쟁 등으로 중국과 관련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됨. 미 구축함 존 매케인 호는 10일부터 중부 다낭 항을 방문, 베트남 해군과 스포츠·음악 교류 행사를 통해 우의를 다짐. 이에 앞서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는 8일 다낭 항 밖에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군 사절단의 방문을 받았음.
- 양국의 국교 정상화 15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군사교류는 시기적으로 중국과 미국,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불편한 시점에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호주 국방아카데미의 베트남 전문가 칼 세이어는 “중국-미국 긴장도는 1년 전에 비해 심화됐으며 그것이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베트남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이어는 “베트남은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면서 “베트남 당국은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측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작심하고 미국 군함의 기항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는 공산주의 이념을 같이해 온 중국에 대해 신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중국 당국의 영토적 야심에 대해서는 우려해 왔음. 이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베트남은 한때 전쟁을 치르고 우여곡절 끝에 15년 전에 관계를 정상화한 미국과 경제 분야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있음.



-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은 남중국해 시사(西沙.파라셀)군도 영유권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중국 정부는 1984년부터 시사군도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난사군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음.

● “美中, 후진타오 美국민방문 협의 지연”(8/10)

- 미국과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민방문을 위한 협의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미중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간 예비 회담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에 따라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 65차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이 11월 이후로 미뤄지는 게 불가피해 졌으며, 경우에 따라선 연내에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음.
- 미국과 중국 양국은 당초 8월말까지 실무차원에 이어 고위급 차원에서 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 문제에 대한 협의를 끝내기를 희망했으나 아직까지 실무협의 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중국의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 중국의 외교 당국자는 “아직까지 실무차원의 협상조차 끝내지 못했으며, 다음주 중에도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일정이 예정된 것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후 주석의 9월 미국 국민방문은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의 의제 등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끝내야만 고위급 당국자들이 만나 회담의 전반적인 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실무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중국측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미국측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및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만나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관측임.
- SCMP는 미국과 중국측이 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을 위한 협의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후속조치로 이뤄진 한미 연합훈련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꼽았음. 중국과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후 주석의 연내 미국 국민방문이 무산될 경우 양자관계와 양국 정부간 신뢰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



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 주석에게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 후 주석이 이를 수락했으나, 후 주석은 위안화 절상 문제,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으로 양국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아직까지 미국을 공식방문하지 않고 있음.

- 후 주석은 지난 4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으나, 이는 공식 방문이 아니었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후 주석과 개별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후 주석에게 미국을 국빈방문해 주도록 공식 초청했으며, 후 주석은 이를 수락한 바 있음.

● 中인민일보, 美항모 서해파견에 반대(8/9)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 미국이 서해에서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파견할 계획이라는 미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시평을 게재했음. 인민일보 국제부 기자와 편집진이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해 논평할 때 즐겨 사용하는 동성(鐘聲)이라는 필명의 필자는 이 날짜 인민일보에 실린 ‘조지워싱턴호는 궁극적으로 어떤 파위를 과시하려고 하나?’라는 제목의 시평에서 미국은 그동안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훈련 참가에 대해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파위 과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고 풀이했음. 시평은 지난 6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조지워싱턴호의 서해훈련 참가 계획에 대해 밝힌 반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위협일변도와 세계 해상의 길목을 포함한 제해권장악이 미국 해양권 확보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음.
- 시평은 이어 미국의 한 정치세력이 미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적수’가 도전을 하면 불리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 위협을 가한다고 밝힌데 대해 도대체 누가 도전을 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평온을 파괴하느냐고 반문했음.
- 시평은 또 미국을 겨냥해 함포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냉전적인 사고를 가진 패권주의의 부활이며 다른 국가를 불안케 한다고 비난했음. 이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고 귀를 막고 방울을 흠치며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게임 논리에 다름아니며 이를 추구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당사자가 더욱 잘 알 것이라고 시평은 꼬집었음.

마. 미·일 관계

● 와다 하루키 “남북 관계 개선..美·日 노력이 중요”(8/12)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72)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12일 “남북관계는 최근 천안함 사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 쉽게 개선을 바랄 수 없게 됐다”며 “현재로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음. 와다 교수는 전남대 5.18연구소와 조선대 민주



화 운동연구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등이 광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최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와다 교수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로의 전진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10년간 남북 협력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가 보장됐던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중요한 활약상”이라고 평가했다.
- 그는 이어 “동아시아 공동체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본이나 한국 등이 인도나 미국 등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동체 참가자는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평등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고, 어떠한 대국도 패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강연회에 앞서 와다 교수는 전남대학교가 수여하는 제4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을 받았다. 와다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재일조선인 사회적 처우 개선, 전후 보상 문제 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최근 한·일 양국 지식인이 발표한 ‘한국병합 무효 선언’의 일본 측 서명을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일 관계 정상화,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한편, 후광 김대중 학술상은 민주발전과 인권 함양, 한반도 평화진전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자 2006년 제정했으며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학술적 측면에서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음.

바. 기 타

● 주한 이란대사 “韓제재시 손놓고 가만있지 않겠다”(8/9)

- 모하마드 레자 바크티아리 주한 이란대사는 9일 대이란 제재문제와 관련, “우리는 두 손놓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한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이란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크티아리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빙고동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주의는 어떠한 양자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바크티아리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넘어서는 독자제재에 나설 경우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대 이란제재 방안을 둘러싼 정부의 검토방향이 주목됨.



- 그는 “어떤 나라가 이란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란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어떻게든 제재 하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세상에는 이란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미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산동결 또는 폐쇄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요청했다고 해서 한국이 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자산을 동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그는 “2000년 멜라트 은행이 서울지점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내 규정을 비롯한 제반규정을 지키며 영업해 왔다”며 “한국과 한국 기업, 한국의 국내은행들과 건전한 거래를 해왔으며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관련기관의 감사를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어떤 불법행위나 불법거래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바크티아리 대사는 “미국의 요청을 받고 나서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양자관계와 양자적 의무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의무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란과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구는 힘들 때 등돌리지 않는 법”이라며 “친구는 항상 친구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바크티아리 대사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주요 고객은 한국 기업들”이라며 “이 은행이 제재를 받는다면 이 기업들의 모든 사업이 제한을 받게 되며 결국 누가 더 큰 손해를 입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크티아리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신중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의 관리들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금명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란 핵문제와 관련, 그는 “이란의 핵 개발은 완전히 평화적인 활동으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내놔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란을 향한 어떤 주장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주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는 북한과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우리는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핵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 간에 정상적인 양자관계가 있지만 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협력은 없다”고 말했다.

● <국제곡물가 급등..중국도 영향권에>(8/9)

- 최근 세계 식량가격 급등이 중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음.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9일 중국의 식량 수출입량 증가와 외국자본의 중국 농식품 시장 진출이 두드러지



면서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중국 식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중국의 식량가격은 내부적인 요인만으로도 상당히 오른 상태임. 전국 10대 쌀 시장의 하나인 후난(湖南)성 이양(益陽)시 란시(蘭溪)쌀 시장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8월 현재 쌀값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오른 50kg당 95위안(1만6천200원) 수준이지만 농민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올해 남부지방의 심각한 폭우와 홍수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적게는 3~5%, 많게는 20~30% 정도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은 작년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임.
- 이런 상황에서 식량 가공기업과 무역상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겠다는 매입을 서두르지만 농민들과 식량 유통업체들은 매도를 꺼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최근 들어 세계 곡물메이저 업체들까지 중국산 곡물에 눈독을 들이면서 가격 급등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음.
- 설상가상격으로 가뭄 때문에 곡물 수확이 급감한 러시아가 이달 15일부터 연말까지 곡물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계 곡물메이저 업체들의 중국산 곡물 확보전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정부는 최근 곡물류 가격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사재기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가격급등 현상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있어 중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日총리담화> 일본 정부 발표 전문(연합뉴스, 8/10)

올해는 일한(한일)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일한(한일)병합조약이 체결돼,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도 나타났듯이, 정치적·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잇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잇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가져다준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심정)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일한(한일) 관계를 구축해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이른바 재(在)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반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실시해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 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천 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나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重層)적이고, 광범위하며 다방면에 걸쳐 있고,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나 인적 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됐고,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그 결합은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일한(한일) 양국은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민주주의나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 군축이나 기후변화, 빈곤이나 평화구축이라는 지구 규모의 과제까지, 폭넓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 일한(한일) 양국의 유대가 더욱 깊고,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希究)함과 동시에 양국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합니다. (도쿄=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8/10/0503000000AKR20100810092700073.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